

희비 엇갈린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전남 협업 나서라”

道 전력·용수 인프라…市 인제·연구 강점
‘서남권 AI 벨트’ 경쟁력 강화 협력 절실

‘국가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 후보지로 전남이 선정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역연합 차원의 협업 체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공·민간 AI데이터센터 인프라가 집적화된 전남과 인제·연구시설 인프라에서 우위에 있는 광주가 협업할 경우 국가적 경쟁력을 갖춘 ‘서남권 AI 벨트 조성’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SDS 컨소시엄(KT·네이버클라우드·카카오 등)은 지난 21일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부지에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광주, 전남, 전북 등 3곳을 후보지로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부지(가격), 용수, 전력 등 입지 면에서 강점을 갖춘 전남을 선택했다.

‘AI 중심도시’를 기치로 내걸며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광주시는 즉각 반발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위해서도 국가AI컴퓨팅센터는 반드시 광주에 설립돼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삼성 SDS 컨소시엄이 사업 부지로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를 특정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공식 발표한 뒤 시의회, 종교, 대학, 시민단체 등 광주지역 각 계각층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시의 거센 반발과 별개로 국가AI컴퓨팅센터는 민간기업이 입지를 선택한 만큼 기존 계획을 반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유치위원회 조직,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던 광주시의 달리 물밑에서 유치 작업을 펼친 전남도는 국가AI컴퓨팅센터로 인한 광주·전남 간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가 과기부 발표 이후 국가AI컴퓨팅센터와 관련된 어떤 환경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역시 광주의 입장을 감안,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결국 전남도 안팎에서는 광주시와 불필요한 갈등 대신 서둘러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남 솔라시도에 국가 AI컴퓨팅센터가 조성되면 광주의 풍부한 AI 연구인력과 연구시설, 반도체 기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서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업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연히 국가AI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인력·연구시설 등 인프라를 갖춘 광주시와 협력해 광주·전남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한복 입고 다도 체험

‘2025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 인사이드앙림’ 행사가 22일 광주시 남구 앙림동 펍킨마을 공예거리 일대에서 열려 한복을 차려입은 시민들이 다도 체험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市 재정 ‘빨간불’…대형사업 지속가능성 재점검”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채무 2조·채무비율 23.63% 달해

이귀순 “세입 핑크 등 총체적 부실”

광주시 재정 건전성이 경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22일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채무가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 2조1천675억원에 달하고 채무 비율도 23.63%(행정안전부 1분기 지방재정 점검 결과)로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25%)에 근접했다”며 “시민 1인 당 부채는 147만7천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채 남발과 내부거래 관행, 세입 추계의 낙관주의가 맞물려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됐다”며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법적

재정위기단체 지정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사정이 이러한 데도 집행부는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한다”며 “이런 태도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광주시는 세입 증가율을 7%로 잡았지만 광주연구원이 권고한 1.4%보다 5배 이상 과다 추계했다”며 “결국 2천300억원의 세수 핑크가 발생해 사업 중단과 행사 취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이 신뢰를 잃었다”고 직격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부는 재정이 어렵다면 서도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도로 확장, AI단지 조성, 글로벌대학 육성 등 총사업비 10조원대의 대형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채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재정은 시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기금·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재원처럼 전용하는 관행이 잠재 부채를 키운다”며

“2024년 한 해에만 2천30억원, 누적 8천600억원이 넘는 내부거래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눈속임식 회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대형사업 재원 조달 계획, 채무 상환 로드맵, 재정 건전화 종합대책 등을 현실적 수치와 실행 절차로 서면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지방채 관리 강화, 세입 추계 현실화, 기금 운용 투명화 등 재정운용 전반의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시민 앞에 있는 그대로의 재정 실태를 공개하고 ‘괜찮다’는 말보다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시 지방채 증가의 주 원인은 경기 둔화로 인한 국제수입 감소 및 지방세입·보통교부세 수입 감소,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전남, AI데이터센터 최적 입지 여건”

道,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초청 강연

전남도는 인공지능 시대 전남의 전략 해법을 찾기 위해 22일 도청 왕인실에서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초청 ‘인공지능 시대 전남도 발전전략’ 강연을 개최했다.

김정호 교수는 삼성전자 산학협력센터장과 미국 전자공학회에서 석학회원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국내 최고 AI 전문가다.

강연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실·국장, 도·시·군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AI 기술이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시대에 전남이 나아갈 전략적 방향을 모색했다.

김정호 교수는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교육·행정·복지 등 전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교수는 “AI 기술 발전과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AI 데이터센터 확보가 필수인데 전남은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전남이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AI 데이터센터 유치 ▲AI 인프라·교육·환경 개선 ▲도민 인식 확산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 유치 등 단계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글로벌 AI 중심 첨단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최근 발표한 SK-오픈AI 공동 ‘오픈AI 전용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함께,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에 삼성SDS 컨소시엄이 해남 솔라시도 부지로 단독 응찰하는 등 미래 첨단 AI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 현안사업 국고 확보 ‘쟁걸음’

전남도는 2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6년도 국고 현안사업 국회심의 대응 보고회’를 열어 국회 예산 심의에 앞서 주요 현안 사업의 국고 확보 전략을 점검했다.

강위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국회 예산 심의에 대비해 실·국별로 예산 반영 현황

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증액이 필요한 사업의 대응 논리를 보완했다. 회의에서는 신규·계속사업 등 130여건의 서면 질의서를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김영록지사를 중심으로 실·국장이국회를 방문해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증액 필요 사업, 신규 발굴 사업 등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국회 증액 사업 반영을 위해 사업별 해당 부처, 국회와의 공고한 협력 체계 구축, 중앙부처 시각에 맞는 반영 노력 마련, 타 시·도와 연계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보고회 이후에도 중간·사후 점검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자”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노인이 있는 곳이 곧 노인보호구역입니다

교통사고보행 사망자중 62%가 고령 보행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없는 도로에서도
어르신이 보인다면 각별히 주의하고 배려해주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광주경찰청
Gwangju Metropolitan Police



전라남도경찰청
Jeonnam Provincial Police